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방안 수립

■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향후 10년간 기후위기 대응계획 등 총망라 제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제주 여건 반영 핵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지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변화 경향과 미래 전망, 기후위기 적응 방안 등을 총망라해 제시할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수립 용역'을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주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미래 전망,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등이 담겨야 한다.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대책도 필요하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도 들어간다.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감축 경로, 수단과 자원, 방향과 속도 등 전반을 알리는 총체적 계획인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이르면 이달 내, 길게는 오는 4월 중 확정한다.

이에 제주도가 수립하려는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 역시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과의 연계와 함께, 제주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도는 용역의 기본 방향을 제주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잡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해 감축경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과 목표치를 설정한다.

또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도 담긴다.

용역은 오는 10~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기후환경 맞춰 들불축제 발전 방향을"

오 지사 "우리끼리 사는 세상 아니"라며 변화 주문
제주시 축제 평가 보고회 계기 본격 논의 이어질 듯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들불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오 지사는 13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축제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 날씨가 화창하고 안전한 축제 준비로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불·폭설·폭우·한파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세계적인 분위기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들불축제 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걸쳐 우리끼리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병삼 시장은 지난 10일 국내 산불 경계 경보 발령에 따른 오름 불 놓기 취소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축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들불축제를 둘러싸고 일각의 전면 폐지 촉구 등 논란이 잇따르면서다.

제주시는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4월쯤 자문기구인 제주시관광축제협의회와 함께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들불축제에서 50명을 모집해 처음 운영하기로 했던 시민평가단은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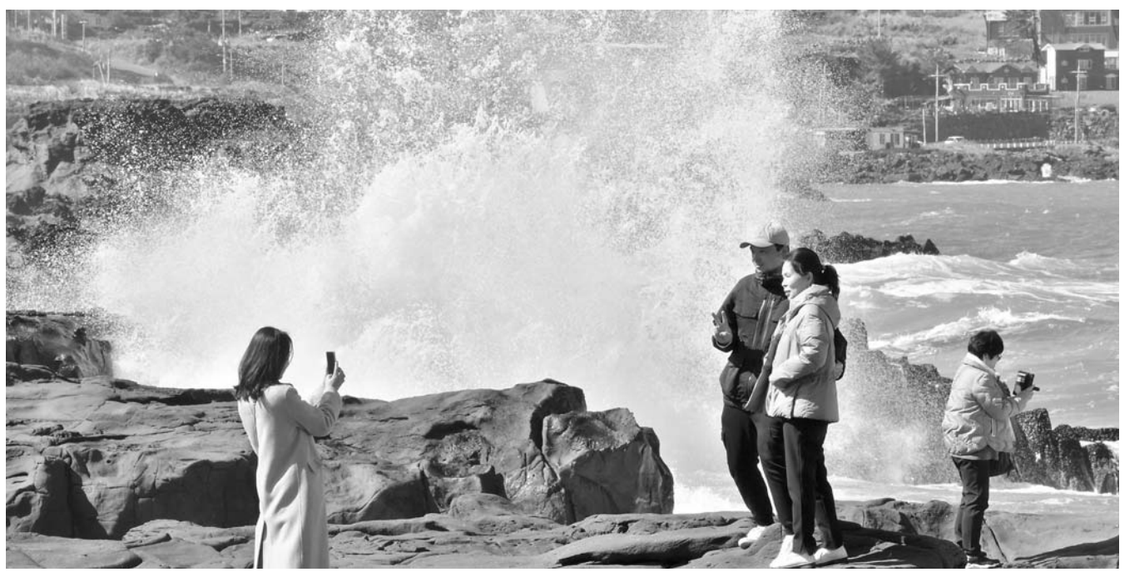
새별오름 불 놓기가 취소되면서 제주시는 억새에 초록색 비닐을 씌워 제작한 가로 200m, 세로 20m 크기의 '2023제주들불축제' 로고 철거 작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형 달집을 포함한 로고 조치 계획이 마련되면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불 영향으로 들불축제가 취소됐던 지난해에는 약 6000만원을 들여 로고를 철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축제 평가 보고회 이후 들불축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들불축제 로고는 새별오름 방문객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조치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외국인에 첫 민원 통역 서비스
중국·베트남어 통역사 배치

제주시가 올해 처음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 안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귀화 외국인 가운데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 통역 상담사를 각 1명씩 위촉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 4회(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진선희기자



높은 파도와 함께 '찰칵' 13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돌염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높은 파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24일까지… 농촌 고령화·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기대

서귀포시가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에 따른 농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추진, 이에 따른 수요조사를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수요조사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농가, 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 친척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유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는 6월 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사업 참여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젖소 농가 10년 새 30% 감소

도, 제주산 우유 차별화 전략 추진 등 위기극복 노력

제주지역 젖소 농가가 1년 새 30% 가량 감소하는 등 도내 낙농산업이 쇠퇴하며 제주도가 '제주산 우유'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낙농가는 2013년 37농가에서 현재 26농가로 30% 감소했다. 원유생산량도 2013년 1일 46.3t에서 현재 35.9t으로 22.5% 줄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A2·저지·저메탄 우유 생산을 통한 제주산 우유 프리미엄화에 나선다. 또 유가공장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낙농가와 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2 우유는 소화효소에 의한 단백질 엉김이 덜해 일반 우유(A1)보다 소화 흡수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 사업을 통해 A2 젖소로 교체·생산할 계획이다.

저지 품종은 홀스타인 품종보다 유단백, 유지방 함량이 높아 유제품(치즈, 아이스크림) 생산에 유리하고 탄소와 분뇨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내 총 61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도는 젖소 품종교체 사업을 통해 저지 품종을 보급하고 우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저메탄 우유는 저메탄 사료를 먹은 젖소가 생산해 '저메탄 우유' 인증을 받은 것으로, 최근 친환경 가치소비 증가에 대응해 친환경 유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제주 자연을 활용한 목장형 유가공장의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6차산업 인증을 추진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아침미소목장', '어니스트밀크'와 더불어 '홍스랜드', '건준목장'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와 동시에 제주지역 유명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